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2010년 1월 21일(목요일)	담당	사회복지문화팀
		연락	고승한 연구위원 726-6145, 010-3808-6101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용 활성화 기대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의 직업훈련 실태와 활성화 방안”서 제언

- 새로운 고용 및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여 고용촉진, 취업기회의 확대, 그리고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 향상, 직업훈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업훈련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직업훈련사업은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어 오고 있음. 제주지역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
 - 대부분 직업훈련사업이 주로 단기적 사업에 치중
 - 제주지역 직업훈련기관의 영세성으로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의 미흡
 - 1차산업과 관광 및 서비스산업의 편중화로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직종의 다양성 부재
 - 새로운 직업훈련시장 개척의 어려움으로 직업훈련기관 간에 경쟁 치열
 - 우수 교·강사 확보, 시설 및 장비의 고도화, 훈련생 모집 등에 어려움 발생
 -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외국어, 미용, 조리, 제과제빵 등 서비스 분야에 편중
 - 직업훈련 유관기관들 사이에 거버넌스 구축의 미흡
 - 지역의 직업훈련정책 개발 관련 전문가 부족 혹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관

련 전문인력의 부족

□ 제주지역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 (가칭)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 자체의 예산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 직업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인적자원개발 등의 업무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지원에 의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정책의 기획, 훈련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모니터링 및 직업훈련 평가 등을 전담하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 제주의 민간직업훈련기관 간에 공동사업 발굴, 네트워크 강화, 정보교류 활성화,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운영, 도내 고용·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킹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정책 및 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와의 협력 강화, 제주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행정기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이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가칭)제주고용인적자원개발포럼 구성 및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 구직·구인간의 미스매칭 문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제주상공회의소, 기업체 및 관련 경제단체간에 정기적 간담회 개최, 도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연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제주지역의 대학, 직업훈련전문학원, 특수학교, 전문계 고교 등의 교과과정 개편 및 신설, 도내 직업훈련기관 간에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 집적 및 교류,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제주지역의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인터넷,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Work-net 등의 최대한 활용, 지역 언론 및 방송에서 직업훈련 및 훈련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